

ISSUE & FOCUS

Newsletter 2016-1

시대착오적인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11월 14일과 12월 5일의 시위, 12월 16일까지의 파업투쟁, 19일 문화제 명목의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의 시위를 TV가 생중계하면서 민주노총의 시위가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들은 민주노총의 과격한 시위에 대해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여겨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시위장면을 보고나서 이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비정규직 보호는 명분에 불과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폭력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위 현장에서의 민주노총은 결코 약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공권력까지도 무력화 시키는 강한 힘을 가진 절대 강자였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주노총의 운동 방식

더군다나 이들이 법까지 유린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었다. 이들

에게 국민의 불편과 준법은 안중에 없었다.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행동이 떳떳했다면 복면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부수고, 질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행태에 대해 여론의 못매를 맞고, 또 ‘복면 폭력시위 금지법’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자, 12월 5일 제2차 시위에서는 각 양각색의 가면과 탈을 쓰고 나섰다. 가면놀이와 탈춤은 원래가 서민들의 애달픔을 씻어내는 해학이 담긴 일종의 한풀이다. 여기에는 익살스러운 재미와 함께 품위가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가면과 탈에는 해학이 없었다. 12월 16일 총파업과 19일 문화제 명목의 총궐기대회에서 보듯이 노조원들의 참여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 파업이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노조 내에서도 노동운동 변화에 대한 반향은 아닌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시위의 명분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내세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12월 10일 25일간 피신해 있던 조계사를 나와 ‘비정규직 철폐’가 적힌 머리띠를 둘러맸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동결이나 감액 노력을 했는가? 비정규직과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한 적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을 했다는 기억이 없다. 오히려 근무시간 변경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수용했고, 정규직 가능성을 높이는 기간제 근로연장에는 반대했다. 심지어 자식에게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다니게 하려고 고용세습 규정을 단체협약에 반영하려는 노조도 있었다. 구조조정 때 그들은 누구를 먼저 내보냈는지 자성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 주장은 실리를 위한 명분용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전국 임금 근로자(1,931만명)의 3%(63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들이 갖는 대표성은 근로자 중에 월급도 많이 받고, 근로조건도 좋은 정규직, 대기업과 공기업의 유노조 근로자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들 급여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한다. 역설적이지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도와주려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줄이는 대신 청년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을 연장해서 처우를 개선하려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 노조가 늘어

나고 있다. 노동자가 줄어드는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한다. 거대 노조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축세력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동자들도 창의력과 정보격차가 소득 격차를 유발한다는 변화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다.

노사상생의 경쟁력 강화가 시대의 요청

세계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개혁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노동개혁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세계 경쟁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노동개혁에 나섰다 노동자들도 한발 양보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 사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나 행태는 기존의 노동자들과는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이 판이하게 다르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나아가 지식산업에서 보듯이 노사의 구분이 얽어지고 있다.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창의성과 능력이 중시되고 성과에 따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노조에는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배하고 있고, 급여체계 역시 개인능력과 성과와 무관하게 노조의 교섭력을 통한 단체교섭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세계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투적 노조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국내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들어올 리 없다. 노사가 협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변화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조도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을 위한 이익 투쟁에서 벗어나 진실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노조운동에서도 개인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직장 공동체인 기업의 발전도 함께 고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 정신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청년들이 꿈꿨던 얼어붙은 고용 한파에 내몰려 있다. 2016년의 경제 전망은 금년보다도 어둡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노동운동을 털어버리고 노사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취월장’(일자리 만들어 취업률 높이고 월급타서 장가가도록 하자)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